

| 위원회 활동 |

# 노사정 힘 모아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체결 이후, 보건의로 업종 노사정 후속합의
- 해운산업 노사정은 한국선원 일자리 위한 ‘연대 기금’ 마련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6일(금) 10: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 날 선언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의 확대·지속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노사정은 이에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공감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실천사항을 담기 위해 논의하였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노사정 간 확대의제개발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노사정이 잠정 합의(3.4.)하였고, 본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동의(3.5.)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勞) 집회 자제와 임·단협 시기 조정**

**(使) 격리자 휴식 보장과 고용유지 위한 노력 등 담야**

합의의 주요 내용은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해서, 노·사는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사측은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부여 및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 및 단체 교섭 시기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하청·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예방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확진자·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 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셋째,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노사는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용자·체당금 지원 확대 또는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국회 등에서도 합의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인사말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고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정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 선언의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정은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국노총도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기업들이 초기에는 감염 정보 공개 요구가 많았지만, 이후에는 자금압박에 대한 해소 대책 건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되돌아보고 경사노위에서 합의 했던 ‘사회부조제’의 본격적인 도입에도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각이 24시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 “사태 개선을 위해 추진한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역의 중요성과 취약계층 등에 재난 기본 소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서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면서, “오늘 노사합의 선언의 정신이 개별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행을 위한 점검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노사정 대표를 포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코로나19'가 확산·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당면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정이 각각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강화

가. 노사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한다.

나. 사측은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장소를 폐쇄하는 한편,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 및 단체교섭의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라. 노사는 사업장의 예방대책을 직접 고용된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하청·파견 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노사정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마.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 2.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

가. 노사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출근, 원격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노사는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시차출근, 원격재택근무, 선택근무의 조속한 시행 지원과 함께, 가족돌봄 비용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노사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한다.

### 3.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가.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

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 및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라. 정부는 체당금 지원을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 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

가. 노사정은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나.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시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위 합의문에서 약속한 사항과 정부가 기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조기에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등에서도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0. 3.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